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사회의 주체로서의 시민 즉 스스로를 공동체의 주체라고 인식하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 해결 과정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학교 밖의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한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서의 참여 경험은 학생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지식, 기능, 덕목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여 주기 때문이다. 더나가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 교육은 선택적 요소가 아닌 시민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계획할 때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시민 교육의 요소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2. 지역 사회에서의 시민 교육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1)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국가에서 편성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교과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교육과정 내에서 시민교육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시민교육은 다른 교과의 핵심 내용에 첨가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시민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유용한 공간, 시설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과 자원은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환경 실태 조사'조차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학습장을 지역 사회로 확대시키면



이러한 한계는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사회적 기업 경영인, 협동조합원, 지역 정치인, 사회조사 전문가, 언론인, 자원봉사자 등 학교 내에서는 충원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유용한 인적 자원들의 도움을 지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4)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질적인 공동체 참여 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은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민적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평생학습 지원 체제

민주시민교육은 생애 내내,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온갖 형태의 인간 활동에서 배우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의 참신성은 지원체계의 개념을 도입한 것과 두가지 평생 학습 요소(조직학습, 실존학습)를 차별화한 데 있다. 시민학습은 조직학습(학교와 대한 같은 전문조직이 제공하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포함)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타의 학습(실존 학습)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평생학습은 3대 구성요소(정규교육 : 학교교육, 비정규교육 : 사설학원, 무형식적교육 :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학습)가 있다. 도멘은 시민학습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무형식적 교육의 특수 형태 하나를 추가하였는데, 이를 ‘우발적 학습’ 또는 ‘양과상 학습’이라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비계획적인 무형식학습 유형이며, 다른 활동의 예기치 않은 부속물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에 대한 체계적 입문을 보장해 주는 학교 교육과 공식적 교육이다. 로위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의 평생학습 체계에는 가족공동체, 친화공동체, 학교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공동체의 다섯 가지 유형의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학습공동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서 한 학습공동체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학습 공동체로 이전하여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여러 학습 공동체를 묶어주고 응집성을 제공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이다. 정규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청소년에게는 효과가 있으나 성인에게는 어렵다. 도멘에 의하면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과 성인은 무형식적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무형식적 학습만 접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은 실용적인 학습 경험을 늘려야 한다. 이것은 생활환경속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적인 조사학습을 늘리는 것이다. 만인을 위한 시민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 조직이 접근하기 쉬어야 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당장의 관심을 끄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생활의 일부이다. 통생애 및 전생애적 학습 과정이다. 도멘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습 서비스 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민주시민 지원체계는 여러 가지 기능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4. 학교 환경에서의 시민교육

4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유럽의 학교 중심 패러다임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진화가 일어나면서 도전에 직면했다. 정보가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 부차적인 역할로 변했다. 졸업장이 더 이상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대안적 교육자원과 비정규 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다. 사회 환경의 압력이 고조되면서 학교는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 했다. 1970년대 부터 학교는 이제 교육 독점권이 없으며, 평생 학습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게 하고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행동방침이 정해졌다.

a. 학생들의 정치사회화를 촉진한다.

- 정치적 문해력을 구성하는 각종 기술이 학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학교는 정치사회화에 중요하다,
- 학교는 광범위한 정치사회화 매개 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사회화와 관련하여 학교는 세 가지 행위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75쪽)

첫째,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사회화 : 역사, 경제학, 사회과, 정치교육, 시민교육 같은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정치 지식, 견해, 태도, 기술, 행동 의도, 행동 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의도적이고 간접적인 정치사회화 :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이지 않지만 차후 특정한 정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습득과 관련이 있다.

셋째,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인 정치사회화는 무형식적 학습 상황에서 일어난다. 예컨대 학생들이 신문에서 정치적 사건을 접하고 그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 Elchardus, Kavadias, Siongers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치사회화 형식 가운데 정규 교육과정의 영향이 가장 낮게 나온 반면 비정규·무형식적 학습(학교에서)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 사회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가 적용했던 가설 중 하나-사회적 및 정치적 기술은 경험학습과 무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가장 잘 형성된다-가 옳았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b. 평생학습 준비

-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전달과 권위에 바탕을 둔 수동적인 학교학습은 복종하는 시민, 수동적인 근로자, 순응하는 공무원을 낳는다.
- 학교학습은 더 이상 지식전달식 교수법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민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결과 학교의 세 가지 전통적인 기능(문화 전달, 사회적 재생산, 사회화)에 평생학습 준비라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덧붙여지고 있다.
- 이를 위해 학교학습은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에 우선 순위를 두는 구성적 접근법, 시민활동(참여, 역할 연기, 문제해결 등)과 학습의 상호작용, 반응적 학습에서 벗어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c. 학교에서의 인권과 참여 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는 민주적인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교내 민주주의의 발현시키기 위한 인권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학교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셋째,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발전시킨다.
- 인권은 만장일치로 인정된 일련의 원칙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구성원들(학생, 교직원, 관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기관계약서에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의 학교시민의 토대가 될 권리와 책임 참고(78쪽 79쪽)
- 참여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참여는 학생위원회나 총회·학생의회에서 집단토론을 벌이는 직접 참여일 수도 있고, 위임을 받은 학생 대표들을 통하거나 학우들의 선거를 통한 간접 참여일 수도 있다.
- 이러한 구조와 제도적 장치도 민주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가장 평범한 상황(교내흡연, 시간엄수, 운동장 이용 규율 등)에서 대화, 협상, 협력, 합의 모색을





실천한다.

둘째, 갈등과 이견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한다.

셋째, 팀워크와 협력학습뿐 아니라 친근하고 비권위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

d.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 학습 조직은 전(全) 조직 수준에서 학습하는 결과로서만 생길 수 있다. 구성원들을 개인적 및 사회적 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조직이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 민주시민교육은 전 학교적 접근방식이다.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의 자료에 따르면, 시민 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실시된다.

첫째, 학풍이나 학교공동체의 무의식적 화법을 통해(분위기, 주요 상징, 가르치는 스타일)

둘째, 교실에서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셋째, 무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e. 공동체 및 사회 환경에 개방

-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사회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가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포르투갈의 기관 파트너십 개념에 바탕을 둔 청소년 조정자(82쪽), 아일랜드의 전환학년 프로그램 참고

-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접근법 - 평생학습 관점, 무형식적 시민교육 중시, 실천학습, 사회적 및 맥락 학습, 책임 이행하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을 견지하면서 계속 학교의 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

5.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시민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가?

(1) 교육 장소에 따른 분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 시민 교육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2)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학생들이 주도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구 분		실시 장소에 따른 유형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교육	학교 밖에서 지역 사회에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시민교육 참여 주체에 따른 유형	학생들이 주도하여 실시한 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인들에게 편지 쓰기 •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제안하기 • 신문이나 지역 소식지에 기고하기 •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 학교 행사에 지역 주민 및 기관 초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법원 견학 • 캠페인 활동 • 지역의 다른 학교와 연계한 연합 워크숍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지역사회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교육 등을 활용한 지역의 시민교육 강좌 개설 • 지역사회 인사 초청 강연회 •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활동 안내받고 참여하기 • 협동조합 매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 •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 활동 참여 •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참여 •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마련한 시민교육 강좌 수강 • 지역 사회의 사회적 기업 이용하기

□ 사례 1 (학교 사회적 경제 동아리 연합 워크숍)

창업가정신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학습

다음은 지난 8월 13일, 2015 사회적경제 동아리 여름워크숍 <미니컴퍼니 창업 워크숍>에 참석한 선사고 학생의 이야기이다.

“미니컴퍼니 창업워크숍이라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 창업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또 협동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뿌듯했어요.”

미니컴퍼니 창업워크숍은 창업팀을 구성해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과 판매 과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배우는 창업활동 게임이다.

미니컴퍼니 창업 워크숍은 앙트십코리아의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교육’으로 진행했다. 창업가정신 교육은 학생들이 실행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여름워크숍에는 선사고, 독산고, 동명여고 등 8개 학교의 사회적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했다.

의류회사 창업을 목표로 이루어진 이날 수업은 가상의 미니컴퍼니 창업에 필요한 조별 역할 분담, 사업 자본금





획득, 아이디어 선정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시작되었다. 조별 5명으로 구성된 팀들은 토론을 통해 기획운영 팀장, 자금관리자, 자원관리자, 디자이너, 마케터로 역할을 분담했다.

각 팀별로 창업에 필요한 가상의 자본금 10만원 외에, 개인자산 만들기 게임을 통해 참가자 개인에게도 자산 획득 기회가 주어졌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이셀터재단, 에코준컴퍼니 등의 기업 사례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례 2 (공정무역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개발국 생산자의 빈곤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 무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촉진하는 훌륭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자체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기획·실행하여 빈곤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빈곤문제와 자신의 실천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스스로의 변화와 나눔이 사회를 보다 낮게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활동을 정리하는 캠페인 발표대회를 함께 실시하여 공정무역 캠페인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공정 무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무역 마크가 찍힌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마크의 모양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수입제품은 공통적으로 공정무역을 뜻하는 ‘Fair’ 혹은 ‘Fair Trade’란 단어를 마크 안에 포함하고 있어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국내에도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가 있다. 아름다운커피를 비롯해 아이쿱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 그루, 한국공정무역 연합 등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

캠페인을 통해 공정무역을 주위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 서울 북서울중 이○○ 교사는 2009년께부터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교내 공정무역 동아리 제자들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도 했다. 5월 9일 공정무역의 날(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을 맞아 전날인 8일 아침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인 사탕 200여 개를 나눠줬다. 또한 공정무역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수업을 통해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김태윤군은 “농부들의 노동량과 노동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성혜빈양도 새롭게 알게 된 공정무역의 지식을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공정무역 마크를 확인해 볼 것 같아요.”

÷ 출처 : 중앙일보 2015.06.14.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에 학생자치회와 어머니회가 연합하여 공정무역을 설명하고 제품을 체험하는





부스를 마련하여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공정무역을 홍보하였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축제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정무역을 알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정무역 캠페인을 통해 “세계의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공정무역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gray border and rounded corners, containing numerous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11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손희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임강사)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일시: 2018년 4월 28일(토)

장소: 서울유스호스텔 교육장

발표자: 손희정(전임강사)





목차

- 1.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서울, 경기, 인천) ‘민주야, 소풍가자’**
- 2.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소풍가자’**
 - 가. 대구경북 민주주의 현장탐방(초등학교)
 - 나. 대전충남세종 민주주의 현장탐방(초등학교)
 - 다. 충북 민주주의 현장탐방(초, 중학생)
 - 라. 부산 민주주의 현장탐방(중, 고등학생)
-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탐방가자’**
 -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서울_꿈길)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사업(서울_민주체험 올레길)
 - 다. 민주주의 학교(수도권_심화과정)
- 4.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 5. 운영 사이트: 꿈길(교육부 운영), 민주로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





프로그램 브랜드명

- 초등학생(민주야 소풍가자)
- 중고등학생(민주야 탐방가자)
- 대학생(민주야 여행가자)





1. 초등학교 민주주의 현장탐방(수도권)

1. 대상: 수도권 초등학교 6학년
2. 운영 연도: 2006~2016년
3. 참가 인원: 13,000명
4. 코스: 필수코스(국회본회의장-헌정기념관)-선택코스(1개 선택 - 이한열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종철기념관, 김대중도서관, 백범김구기념관, 남산안기부 등)



<국회본회의장>



<이한열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 초등학교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수도권)

시 간	장 소	활 동
09시	학교	학교 출발 (교사용 자료집, 학생용 워크북)
10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본회의장 견학 /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 국회의 하는 일 /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시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헌정기념관 모의국회체험 / 기념관 견학
12시	헌정기념관 앞 벤치	점심식사
13시	국회의사당 앞마당 잔디	공동체놀이-발 붙여 달리기, 느리게 달리기, 민주주의 낱말 맞추기, 무릎 의자 만들기 등
14시	이한열 기념관 (코스 선택)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 이한열 열사의 삶 / 민주주의 이미지 그리기 / 타일 만들기
15시 30분	학교로 출발	





2.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대전세종충남)

1. 대상: 대전세종충남 초등학교 6학년
2. 운영 연도: 2015~2017년
3. 참가 인원: 1,000명
4. 코스: 솔로몬로파크-대전 평화의 소녀상-구충남도청(대전근현대사전시관)
5. 개발 자료: 교사용 자료집, 학생용 워크북



<솔로몬로파크>



<대전평화의소녀상>



<대전근현대사전시관>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서울_교육부 꿈길)

1. 대상: 전국 중, 고등학교
2. 운영 연도: 2015~2018년
3. 참가 인원: 1,000명(교육부 '꿈길' 사이트에서 신청)
4. 코스: 대학로길(4.19혁명 1)-광화문길(4.19혁명 2)-명동길(6월민주항쟁)-청계천길(노동, 인권)
5. 개발 자료: 자료집, 워크북 4종, 한국민주화운동사 DVD, 서울민주화운동지도



<광화문길_4.19혁명 50주년 탐>



<명동길_명동성당>



<서울광장>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서울_교육부 꿈길)

시 간	광화문길(4.19혁명①)	명동길(6월민주항쟁)
7일 전	사전 자료 배송(자료집, 워크북, 여행자보험, 기념품 등)	
10시 0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착(차량 지원 없음)	명동성당 도착(차량 지원 없음)
10시 00분 ~ 10시 30분	체험일 전 학교에서 진행 (참여 교사) - 프로그램 소개 - 한국민주화운동사 영상 시청 - 4.19혁명 설명 체험일(10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집결	체험일 전 학교에서 진행 (참여 교사) - 프로그램 소개 - 한국민주화운동사 영상 시청 - 6월민주항쟁 설명 체험일(10시): 명동성당 집결 - 명동성당
10시 30분 ~ 12시 30분	- 4.19혁명 50주년 기념탑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광화문 네거리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 4.19혁명 표석 - 덕수궁	- 서울YWCA / 향린교회 - KEB하나은행 본점 - 서울광장 - 성공회성당(덕수궁)
12시 30분	학교로 출발	학교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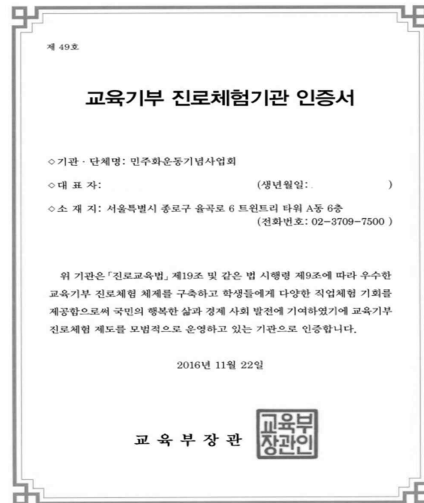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서울_교육부 꿈길)

시 간	대학로길(4.19혁명②)
7일 전	사전 자료 배송(자료집, 워크북, 기념품 등)
10시 00분	혜화동로터리 _ 동성고등학교 정문 앞 집결(차량 지원 없음)
10시 00분 ~ 10시 30분	체험일 전 학교에서 진행 (참여 교사) - 프로그램 소개 - 한국민주화운동사 영상 시청 - 4·19혁명 설명 체험일(10시): 혜화동로터리 _ 동성고등학교 정문 앞 집결 - 혜화동로터리 동성고등학교 4·19혁명 기념비
10시 30분 ~ 12시 30분	- 마로니에공원(4·19혁명 당시 서울대 문리대학 자리 _ 전국 교수단, 학생 선언문 발표) - 서울대 의대 본관(4·19혁명 당시 서울대 의대 자리 _ 의대, 약대 학생 시위 참여) - 성균관(조선시대 교육기관, 성균관 학생 자치회, 국정 정책 논의 등)
12시 30분	학교로 출발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인증(서울_교육부 꿈길)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서울시교육청_올레길)

1. 대상: 서울시 관내 중, 고등학교
2. 운영 연도: 2016~2018년
3. 참가 인원: 11,000명(민주로드 사이트에서 신청)
4. 모집: 전용 사이트 '민주로드'
5. 선정: 추천을 통해 선정
6. 코스: 대학로길(4.19혁명 1)-광화문길(4.19혁명 2)-명동길(6월민주항쟁)-청계천길(노동, 인권)
7. 개발 자료: 자료집, 워크북 4종, 한국민주화운동사 DVD, 서울민주화운동지도
8. 주최/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교육청_올레길)

시 간	대학로길(4.19혁명②) - 필수 코스 1	명동길(6월민주항쟁) - 필수 코스 2	광화문길(4.19혁명①) - 대체 코스(기상 악화시)
7일 전	사전 자료 배송(자료집, 워크북, 기념품 등)		
09시	학교 출발(차량 지원)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관 소개 - 프로그램 영상 시청 - 4.19혁명 영상 시청과 설명 - 안전교육 / 해화동로터리로 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관 소개 - 프로그램 영상 시청 - 6월민주항쟁 영상 시청과 설명 - 안전교육 / 명동성당으로 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관 소개 - 프로그램 영상 시청 - 4.19혁명 영상 시청과 설명 - 안전교육
10시 40분	- 해화동로터리 (동성고등학교 4·19혁명 기념비) - 마로니에 공원 - 서울대 의대 본관	- 명동성당 - 서울YWCA / 향린교회 - KEB하나은행 본점 - 서울광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또는 서울시청 시민청
12시	점심식사 (성균관대 입구 식당가_ 참가자 부담)	점심식사 (덕수궁 주변 식당가 _ 참가자 부담)	점심식사 (덕수궁 주변 식당가 _ 참가자 부담)
13시	성균관	성공회성당(덕수궁)	덕수궁
14시	학교로 출발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서울시교육청_올레길)

사진으로 보는 광화문길(4.19혁명 1)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서울시교육청_올레길)

사진으로 보는 명동길(6월민주항쟁)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서울시교육청_올레길)

개발 자료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민주주의 학교)

1. 대상: 수도권 중학교
2. 운영 연도: 2017~2018년
3. 참가 인원: 200명(담당자가 학교 섭외)
4. 프로그램 운영: 총 6차시(교실 4차시, 탐방 2일), 1차시 45분 2회
5. 개발 자료: 자료집, 워크북 4종, 한국민주화운동사 DVD, 수업 부교재 등



<2차시_열사에게 쓰는 편지>



<5차시_명동길 민주주의 현장탐방>



<6차시_민주주의 실천 활동>



3.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민주주의 학교)

구분	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회차	14:00 ~ 15:40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활동 활동과 목적 이해 - 민주주의 이해와 역사 / 세계의 민주화운동 - 민주주의 마인드맵
2회차	14:00 ~ 15:40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시청각 자료 시청 - 열사와 의사란? / 우리가 알고 있는 열사와 의사 -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 - 열사에게 편지쓰기
3회차	14:00 ~ 15:40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자료 시청 - 민주주의 참여 (선거에 대하여) / 선거 체험
4회차	전일	민주체험 올레길 (1)	민주체험 올레길 탐방 (1) - 모둠별 활동
5회차	전일	민주체험 올레길 (2)	민주체험 올레길 탐방 (2) - 모둠별 활동
6회차	14:00 ~ 15:40	민주주의 실천 활동 - 선거 연령 하향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가 할 수 있는 것 - 의견 들기와 토론하기 / 모둠별 발표와 정리





4. 대학생 민주주의 현장탐방

1. 대상: 전국 대학생
2. 운영 연도: 2012~2018년
3. 참가 인원: 600명(공모 형식으로 모집하여 선정)
4. 프로그램 운영: 1팀 4명 기준(전국 민주주의의 탐방처, 2박 3일, 60만원 지원)



<선정팀 발대식>



<탐방하는 모둠 1>



<탐방하는 모둠 2>



5.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사이트

민주로드 **minjuroad.or.kr** (민주야 소풍가자, 탐방가자, 여행가자)

공지사항 [더 보기](#)

- [안내] 2018년 민주체험 출레길 예비 안내 | 2018-03-26
- 청소년 대상의 서울 민주주의 탐방 자료집 6종 완간 (다운로드) | 2018-02-21
- <2017 민주야 여행가자> 설문 참가자 선을 지금 열람 | 2017-12-18
- 2017년 민주체험 출레길과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완료 | 2018-03-26
- <2017 민주야 여행가자> 최종 발표회 결과 공지 | 2017-11-16

사진 갤러리 [더 보기](#)





5. 민주주의 현장탐방 운영 사이트

꿈길 (민주아, 탐방가자)

꿈길 교육부
"꿈하는 아이들의 길"입니다

소개/공지

진로교육/진로체험

진로체험지원센터/자원봉사자

진로체험기관인증제

마이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님이 체험처로 로그인 하셨습니다.

출 | 로그아웃 | 회원정보수정

글자 크기

체험프로그램신청관리

홈 > 마이페이지 > 체험프로그램신청관리

달력으로보기

엑셀다운로드

검색

체험일

신청상태

::전체::

프로그램명

학교명

총 : 47건

▲학교명순 ▼체험일순 ▼최신신청순

100개씩 보기





MEMO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





12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초등)

송미숙 (상현초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방향

상현초등학교 송미숙





민주시민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민주시민 교육이란?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유럽

1970년대 이후 학교폭력문제, 다문화, 경제적 빈부격차, 인종간의 차별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5~6학년교사용지도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우리 나라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5~6학년교사용지도서 -경기도교육청-

빈부격차의 심화, 가정의 해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른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 심화로 공동체의 붕괴 위기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할 필요성 제기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초등교육과정에서 관련교과)

도덕



**우리·타인
과의 관계**



**협동, 준법,
공익, 인류애,
평화**

사회



일반사회



**지역의 문제해결, 선거의 필요성,
지방의회, 지방정부,
헌법, 민주정치의 원리,
국가의 권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창의적체험활동 영역)

↪ 영역별 활동의 변화 ↩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의 변화 (출처: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자료 PPT)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서울상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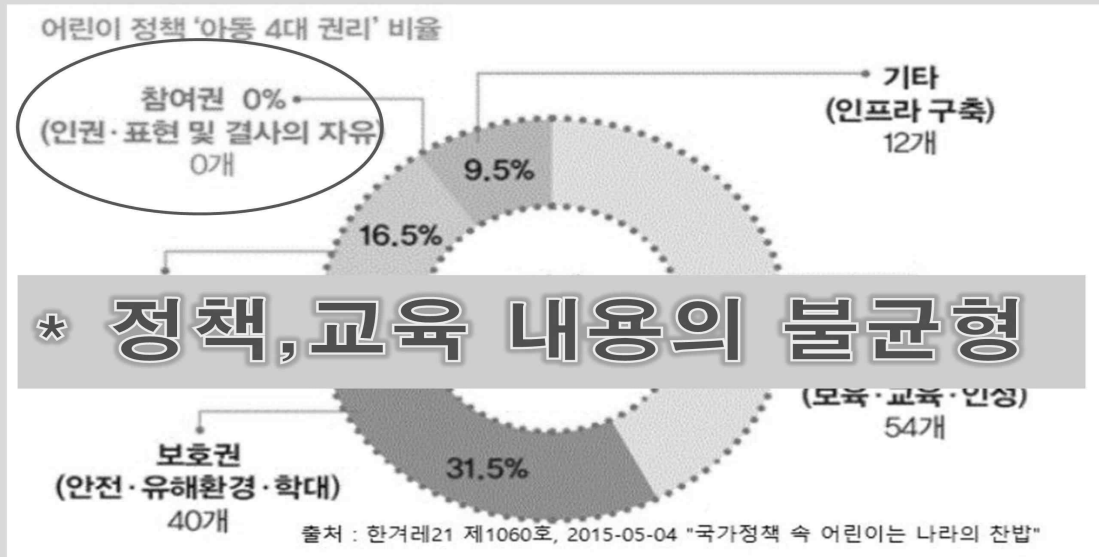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서울상현초등학교)

자치활동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다모임	국어(4) 창체(2)	국어(4) 도덕(2) 창체(9)	국어(4) 도덕(3) 창체(3)	국어(3) 도덕(2)
학년다모임	창체(2)	국어(2) 도덕(2) 창체(2)	창체(1)	국어(2)
상현다모임 (4~6학년)		창체(4)	창체(4)	창체(4)
	8	21	15	11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 * 절대적인 시수 부족
- * 인성교육(덕목) 중심의 내용
- * 어린이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
- * 참여권 관련 내용 부족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방향

- * 자치활동 시수 확보(주1시간)
- * 문제(갈등)해결 중심
- * 어린이의 삶과 관련된 내용
- * *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방향

**일상적으로 민주적인
사회(가정, 학교, 지역)
를 만들어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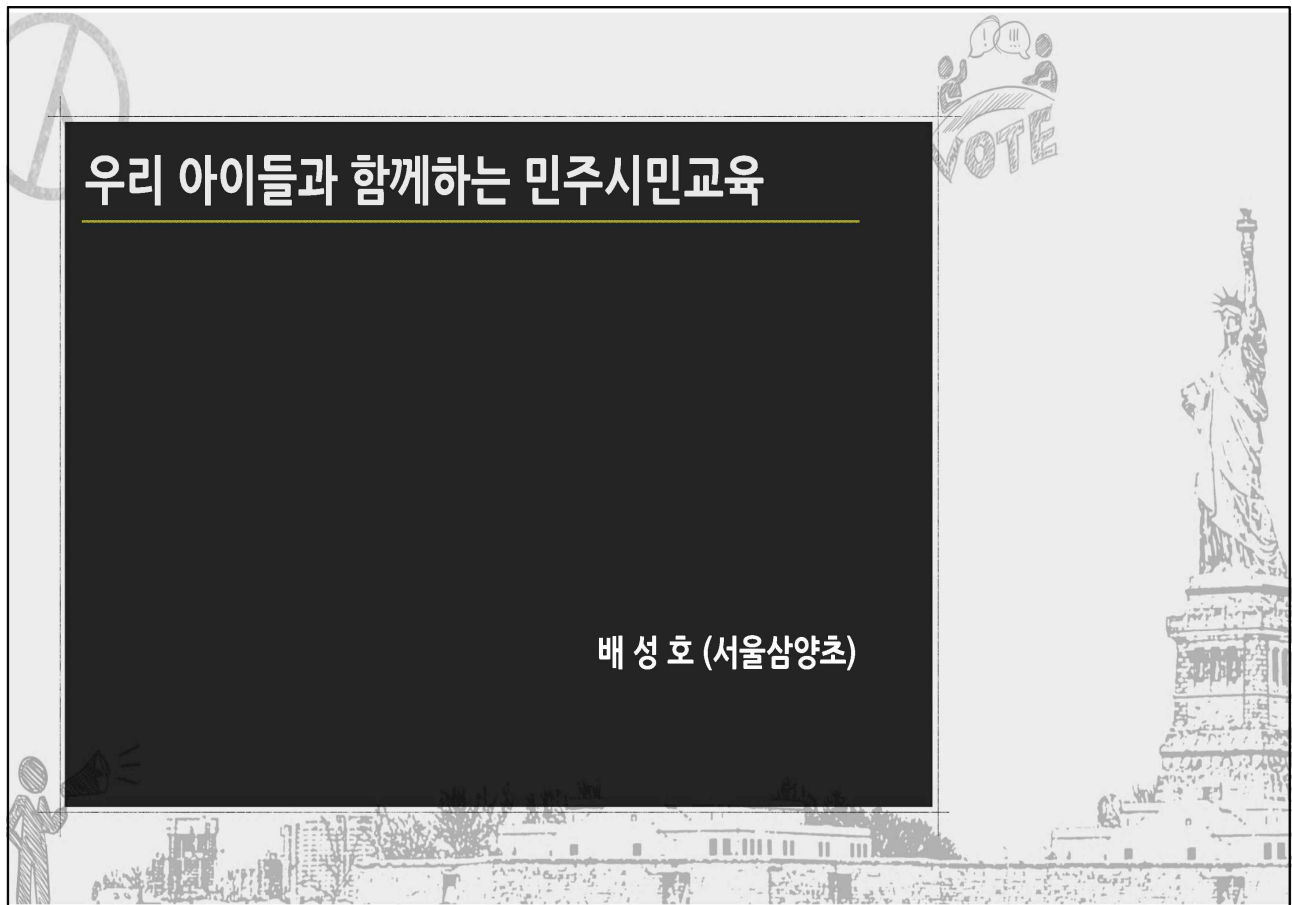




1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초등) [부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배 성 호 (삼양초등학교 교사)





1. 발딛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회참여



교과서에선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자전거 통학 금지 가정통신문이 배부되는 실정





1. 발 딛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회참여

- ‘마을이 학교다’ 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와 마을을 직접 답사하면서 찾은 문제점들을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음
- 단순히 교사 혼자가 아닌, 지역시민단체의 선생님 등을 통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교감하며 모색할 수 있었음
-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하게 살피면서 본 수업을 학생들과 더불어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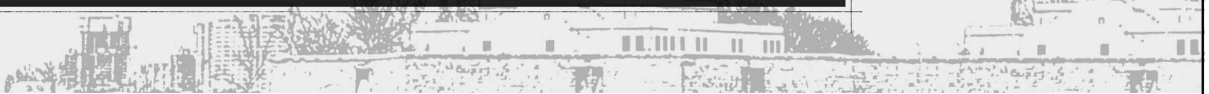


2. 안전지도로 동네를 바꿨어요!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 범죄 예방 교육과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함께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추세
- 통학로를 비롯, 아이들이 잘 노는 공간들과 위험한 공간을 살펴볼 수 있음





2. 안전지도로 동네를 바꿨어요!



-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학교 주변 위성지도 출력하여 확인





2. 안전지도로 동네를 바꿨어요!

〈학교안전지도의 핵심은 ‘지속적 관심과 참여’〉

- 학교안전지도는 안전교육도 되고, 지도를 만드는 교육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뜻 깊은 활동임
- 지도 제작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므로 위험 표시된 곳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꾸느냐가 중요
-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과정으로 질적 전환이 이뤄지며 보다 풍성해질 것





2. 안전지도로 동네를 바꿨어요!

〈학생들의 소감〉

“ 동네의 문제는
어른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위상과 달리 학생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음
-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박물관 구석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음

개관 이후 출근 현장 체험학습 전 이런 사항을 박물관에 지적하여도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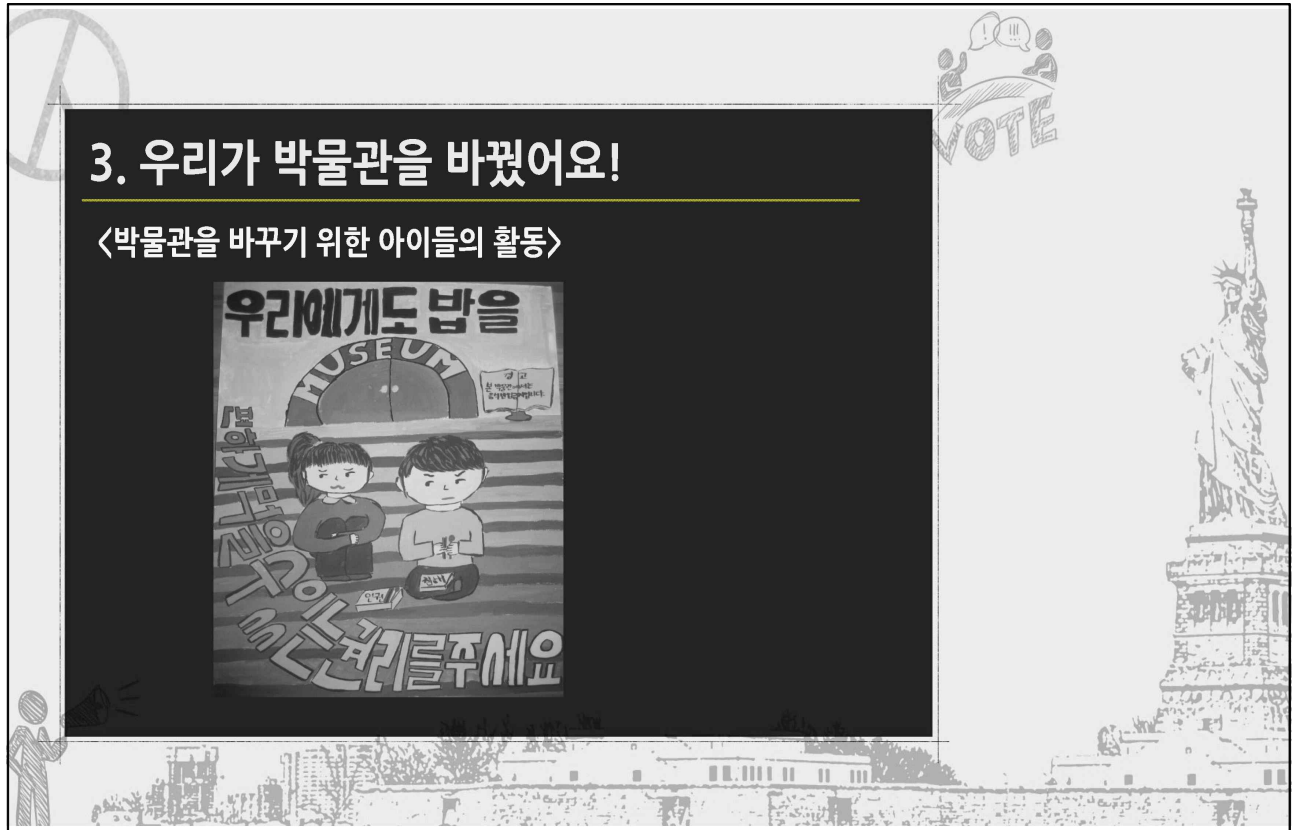
'중앙박물관 상대 민원' 통해 민주주의 배웠어요.
송현숙 기자, [경향신문 기사(2012. 9.11)]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배성호(2016), 초록개구리

지속적인 민원 끝에 결국 실내 도시락 먹을 장소를 마련,
이 기사는 추후 책으로까지 출간되었음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 아이들이 제기한 사안이 해결되었다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님
 -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발달
 -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결과보다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움



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살펴보고 좀 더 나은 것은 무엇인지 살피며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임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쌍방향적 건축과 교육의 의미〉

“건축가는 ‘내가 그린 대로 살아라!’ 라고 주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불확정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주민들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재조직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쌍방향적 건축이다.”

- 건축가 故정기용



이처럼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에 아이들을 강제로 끼워
맞추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새롭게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새로운 만남의 과정에서〉

진선진미(眞善眞美)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아름다워야 한다’

- 故 신영복 -

목적의식이 뚜렷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함





3.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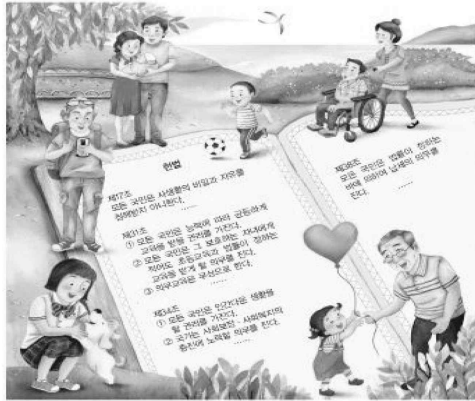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주관하는 문광부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박물관 운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음
- 매년 박물관 현황 자료에 박물관 별 소장 유물과 수장고 면적 등은 산출되지만, 관람객을 위한 시설 등은 아예 집계 대상조차 되지 않음



우리 문화 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동영상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또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이 주제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36 |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알아봅시다.

나린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나린이의 친구들은 박물관에 도착해서 문화유산이 가득한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나편이와 친구들은 도시락을 먹기 위하여 박물관 안에 있는 식당에 갔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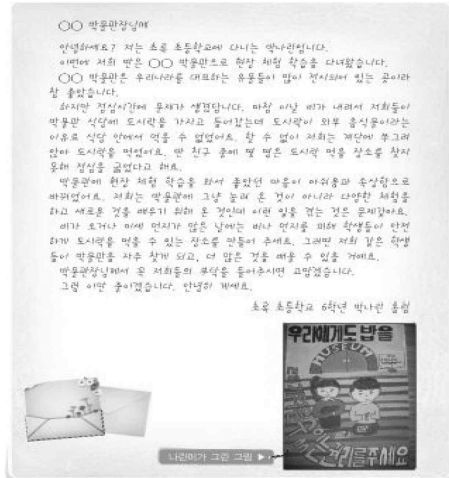
여러분이 나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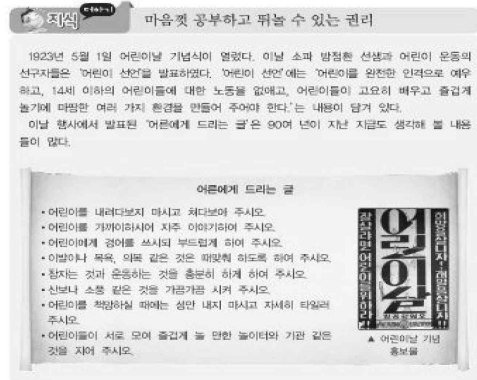




박물관에 다녀온 후 나린이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린이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물관장님께 편지를 썼다.



나린이와 친구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려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물관 안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오늘날 '어른에게 드리는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미래의 주역이자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일련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중





A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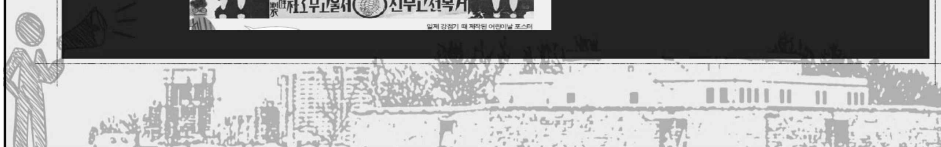
- 어린이날은 왜 만들었을까요?


잘살려면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날

희망을 살리자! 쾌락을 살리자!!

일곱첫월오
신무교선복거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lxiii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초등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향〉

1. 학습자의 이해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
2. 지적 유연성과 비판적 사고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
3. 교과 통합적 학습이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4. 살아있는 이야기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민주시민교육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

- 사회과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반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함



이를 통해 사회과는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기를





A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헌법?

- 헌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
- 아이들에게도 헌법은 의외로 익숙한데, 이는 이미 초등사회 교과서에서도 헌법을 주요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임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아이들은 헌법 전문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이 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조항들이 눈에 띄 수 있음



8. 헌법으로 열어나가는 수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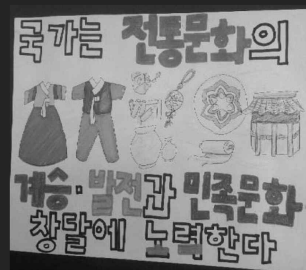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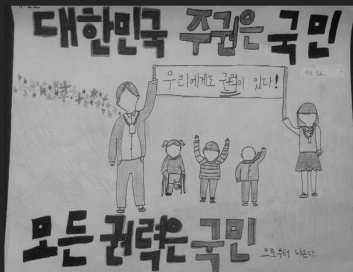


헌법에 제시된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위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수업도 가능함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헌법에 제시된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위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수업도 가능함





4. 생활 속에서 열어나가는 민주시민교육

학생들은 교과서 속 사례가 당위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닌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내용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





14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중등)

정 영 철 (대영중학교 교장)

들어가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의 중요한 교육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시되는 민주시민의 자질 또는 덕목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는 교과나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 취사선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덕목이나 가치를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덕목과 가치들은 인성교육과 혼재되어 뚜렷한 지향점과 체계성이 없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결국 집중의 효과가 없고, 전체적인 목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민주시민 관련 교육은 머릿속에서 암기된 지식으로만 그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태도나 행동양식으로서 내면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사회의 비민주적 시스템과 문화, 입시경쟁교육구조 등에서 기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그 당위성과 교육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능동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고 정치적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필요로 하므로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은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체득될 수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이다.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문과 문제를 판단하여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른 바 자기결정 역량(self-determining ability)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선(公共善) 추구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역설의 지점을 포함한다. 공동체성과 개체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변증법의 지점에 민주시민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공동체가 얼마나 민주화될 수 있는가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을 얼마나 시민으로서 자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태도를 길러 개인과 국가, 세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번영과 질서를 더 강조하는 일방적인 시민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함양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여전히 보수주의자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공공(公共)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일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직도 시민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정의는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 민주적 방식

오늘날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보장, 기회의 균등, 다수결의 원칙, 자유로운 의사 표시, 대의 제도, 시장 경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정치, 경제, 사회생활 등 제 영역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갖추게 된 것은 그것들이 어떤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 삶의 조건에서 그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영위하기 위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삶의 원리나 지혜로 성숙시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원리나 지혜들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예측의 위협을 제거하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만큼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비민주적인 양태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주장만을 극한적으로 고집하는 사례, 인간 경시와 법질서





파괴의 반사회적 행동의 범람,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의 미숙, 자율적 집단 과정의 미숙 등을 지적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사회는 가치와 지향의 다원성과 이익과 입장의 다양성을 전제한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와 사회문제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와 해석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아울러 한 공동체 내 다양성과 차이 간 적대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토론과 소통을 요구하며 상호 이해와 인정 및 공감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정치 문화 형성의 중요한 도구인 민주시민교육은 다원주의와 민주적 토론과 소통 문화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토론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수용이다. 그런 원칙의 수용이 없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과 다원적 관점도 민주시민교육에서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일상의 삶이 세계적인 규모로, 더욱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 세대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 학교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논쟁성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그 핵심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민주시민교육을 지양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성장시키겠다는 교육적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는 협의의 민주시민교육에서만 아니라 교육 일반이 갖는 본질적인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다. 즉 후세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목적에서 뿐 아니라, 삶의 주체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교육 본질에 비추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당위성이 인정된다.

우리 사회는 이념, 지역, 세대, 소득계층 등의 사회적 균열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끊임없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듯 갈등과 대립이 심한 문화일수록 사회적 갈등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여기는 상대를 적(敵)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게 마련이다. 냉전적-이데올로기적 대립 같은 부정적인 갈등은 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의 생산적 발전을 이끌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갈등도 있다. 투쟁이 아니라 논쟁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사회를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규정된 ‘교육의 중립성’ 조항이 교사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되어 민주시민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교사들이 정치교육을 기피하고 일상화된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 교육으로 형식화되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따르는 현실 세계의 사회 현안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육적 풍토는 역설적이게도 대립이 심화된 한국 교육 현실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치 1970년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졌던 독일이 극심한 이념대립에 따른 교육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토론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학교의 확대나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질문 있는 교실”정책 등의 등장은 한국 교육 현실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는 분명하다.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치적 이념과 의견이 서로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생하는 관용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시민(학생)들이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극심한 냉전적 형식의 이념 대립이 지배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해오지 못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지향을 가진 모든 정파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지금껏 제대로 된 공통의 기반을 찾지 못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지향점이 폭력의 사용 없이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의 삶의 틀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학교교육도 민주적 논쟁의 장 안으로 들어와야 할 의무가 있다. 말하자면 교사는 논쟁에서 공정한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논쟁주체를 선택함에 있어 학교에서 사회 현안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로부터 차단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정제되지 않은 채 쏟아지는 정보와 해석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는 수업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견해는 유보하고, 정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차이와 대립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1)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16) pp.66~67.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원리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원리를 추구한다.

첫째, 당사자 참여의 원리이다. 즉 교육 내용과 방법의 결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체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결정이 학교 상황에 처해 있는 공동체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성의 원리이다. 한 사회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라 교육목표, 내용, 방법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시대상황, 지역 수준, 학교의 수준, 공동체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방법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주체는 오로지 하나만의 민주시민교육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주체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의 주체는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해당 되는 오로지 하나만의 목표와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어떠한 것을 설정해도 좋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학교 공동체가 하나로 잘 조화된 유기체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독자성과 활력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잠정성의 원리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적 변수가 변하면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진보한 2000년대에 요구되는 상황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정신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거쳐 변모하고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마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는 불변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엄의 정신이라든지, 인간 자율성 신장과 같은 목표는 기본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로 살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각성된 의식과 더불어 이해의 깊이에 따라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입장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성을 가지는 이유?

첫째, 시민사회는 기존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 제시를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 교정력을 가진다.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고 따라서 폭력과 정권의 전복과 같은 불안정과 단절을 가져오지 않고 사회가 진보하는데 일조한다.

둘째, 시민사회에서는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민의 높은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 사회에서의 결정은 가급적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사회의 절차는 좋은 지도자를 부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누구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반면,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그들이 갖춘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하고, 시민들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시민사회는 비민주적 사회보다 정의롭게 통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집권 세력이 불공정한 통치를 한다면 시민들은 그들을 교체해 버릴 수 있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진보나 보수 혹은 그 밖의 어느 쪽 주장이고 정책이건 간에 그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민주주의 운영 원칙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어느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고 보편 가치에 공명하는가, 합리성과 공익과 공정성의 근거에서 볼 때 어느 주장이 더 합당하고 어떤 정책이 더 지지할 만한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타당한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시민적 역량이고 그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결림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이념)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시민 양성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관심 갖는 대상이 수업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내용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그런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구현되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학생자치활동 강화나 토론 및 참여 수업의 확대, 그 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교육 관계자들 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내용의 격차가 크고, 이를 둘러싼 이념적 온도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질서와 준법정신에 기초한 인성교육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민주시민 관련 지식과 태도, 가치, 참여 등의 핵심 요소가 수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학교교육 전반에서 체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작 사회적 합의는 차제 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이를 교육활동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그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는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 있고, 각종 교육관련 법령·지침에 의해 강제되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교의 특색을 드러내야 될 학교 고유의 몫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상당 시간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보니 학교 및 담당교사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정도의 차가 매우 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생자치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만이라도 학교에 온전하게 돌려주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 여전히 가르칠 교과내용이 너무 많고 교과간의 장벽이 높아서 교사의 협업체제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필수적이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는 교원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당장은 기존 학교 내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만이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년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구조화하고, 교과별로 10개 교과가 2회만이라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연간 20개의 주제에 대한 논쟁수업을 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왜곡되어 ‘정치교육 금지’로 강제되다보니 교사가 사회현안을 수업주제로 연결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논쟁 수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학습 주제로 간주되다 보니 그 필요성이 경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시민교육은 개별교과 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국가교육과정의 틀에서 보면 여러 교과 영역에 걸쳐 범교과적 학습주제 형태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보니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국·영·수 중심의 교육풍토에서는 자연히 경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영·수 이수단위를 줄여서라도 영국, 프랑스의 사례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시민단체들이나 외부 기관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해야만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좀 더 소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은 시민인가? 교복 입은 시민!

오늘날 누가 시민인가의 문제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이면 누구든 그는 시민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오늘날 이야기 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단 한사람의 구성원일지라도 그를 시민의 지위에서 배제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국경, 성(性), 부(富), 종교, 문화적 배경 등 그 어떤 요인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시민으로 태어나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가진다.

한 단위 공동체가 얼마나 민주적 사회로 발전해 가느냐 하는 정도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어진 조건에 체념 또는 순응하지만 않고, 자신들을 얼마나 보다 바람직한 시민의 지위로 끌어 올리느냐에 달렸다.

다만, 누구나 시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마치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적 품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어떤 사람이 시민의 지위를 갖게 되었을지라도 시민으로서의 확실한 자각을 갖추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더러는 시민의 지위를 스스로 더럽히고 시민사회를 향한 인간의 기대에 배반할 수도 있다.





Tip

민주시민 자질 목록(미국 사회교육 협회)

- 민주시민은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 그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 그는 자유 사회에 제반 과정과 절차를 숙달한 사람이다.
- 그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무를 느끼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위의 목록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주지만 누구나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각개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역사적 배경과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에 따라 시민의 자질을 규정하는 강조점 혹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시민정신에 관한 자질을 주장할 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지식, 태도, 기능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시민성은 발현될 수 없다. 국민이 무지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그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를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결정 역량을 길러주어 예비 민주시민으로서 학교에서 자력화할 수 있도록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 사회에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판단·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일 것도 같고, 장차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일 것도 같다.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자는 교육정책은 학생들을 장차 시민이 될 예비 시민적 존재로서 학교 내외에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것이다. 학생은 예비 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 능동적 시민으로 대우하자는 것, 내 삶에 영향을 줄 일들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생산하자는 것은 장차 학생들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 정신의 핵심이며,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이유이다.





논쟁수업의 중요성

학생들을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현명성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이르는 교과 및 특별활동에서부터 학교의 경영과 풍토 조성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의 전체 계획과 노력이 일관되게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핵심적 과정인 수업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수업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현명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의무나 책임 의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현명성은 사물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때 증진된다. 사물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처리능력, 비판력, 창의력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교사의 권위주의적 교수 방법에 의한 일방적 지식 암기로는 길러지기 어렵다. 학생들이 직접 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해결 답안이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책임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학생 모두에게 무관하지 않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데서 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법은 바로 학생들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토론·토의·논쟁수업(이하 ‘논쟁수업’으로 통칭함)이다. 논쟁수업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법으로 삼는 것은 논쟁이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논쟁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논쟁은 당사자 간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논쟁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셋째, 논쟁은 비판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넷째, 논쟁은 당사자 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킨다.

논쟁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논쟁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이해, 기능, 태도, 인성과 사회성의 발달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급 수업에서 학생의 언어 발달, 상대방과의 상호 이해, 정치 협상에서 상대방의 관심 사항에 대한 민감성,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 등을 신장시키고자 할 경우 교사는 논쟁수업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전제

첫째,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닦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지 학교가 도맡아 완결할 수 있는 교육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기초를 튼튼히 다져 주는 일에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는 우선 그 교육과정에 시민 정신 체득을 여러 선택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아닌 필수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의 과정에서 질문이 있고, 토론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획일적 암기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객관식 평가 방법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방법이 창의적으로 제안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끊임없는 실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유인이며, 학습의 과정에서 그들이 자유를 행사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는 희박해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과 점수 따기 경쟁에 쫓린 교과 교육의 관행, 학생자치활동을 조장시킬 만한 시설과 경험 부족, 학생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매우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치 훈련이 소홀히 되는 한 고립주의적, 이기주의적 성향의 인간들이 눈에 띄지 않게 길러질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분단, 학급, 또는 학교 수준에서 직접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리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유사회에서 필요한 개방적인 마음과 비판적인 정신은 책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활동을 통한 그들의 집단 과정에서 확인되고 촉진될 수 있다.

학교의 자치 능력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과 교육행정에서도 왕성하게 촉진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솔직한 대화와 토론으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 결정이 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에는 필요에 따라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외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신체·정신적으로 부자유한 조건,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그 어떠한 이유 때문으로라도 교육의 과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는 수업의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교사나 어른에게 불만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편애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는 보이는 경우이다. 오늘날 고교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그들에게 적합하지 못했던 교육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좌절의 경험을 안고 사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대접을 받은 결과이다. 단 한 사람의 경우일지라도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떳떳한 인간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가 민주적 공동체이며, 바로 그러한 원칙에서 움직이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학교는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남다른 수범을 보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 예컨대 약속, 규칙, 법 등을 통제 수단에 의해서라기보다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율지향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비교육적인 영향을 차단하거나 이것을 지적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중요한 노력이 바로 학교사회 스스로가 교육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으로는 줄서기나 약속 지키기와 같은 생활 규범을 기본 습관이 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참여해야 할 원칙이라면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동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실천 활동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실천으로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핵심적 활동인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학생을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게 하려면 통제나 훈육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치(自治)’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자치 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학교생활 속에서 매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학생들을 자력화(自力化)하는 것이다.

학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력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대표가 함께 만나 학교활동을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학교의 일상적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자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힘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는 학생들만의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모아질 때 실효성 있는 학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Tip****학생자치의 문제점**

- 사업별 이행 요구가 중복, 혼잡, 과다하여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가 곤란
 -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 필수 적응교육 과다
- 학생자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미흡으로 형식적인 학생자치 운영 초래
- 학생회 선거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스펙 쌓기’로 전락
- 학교축제, 수동적 캠페인 등 이벤트 중심의 학생회 역할의 한계

- 입시 위주의 교육에 따른 학교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학생자치를 경시
-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 및 학교장의 피드백 미흡
 - 학생 측면 : 자발성 부족, 낮은 인식 수준
 - 교사 측면 : 열정과 역량 미흡
 - 학교 측면 : 효율성을 이유로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만을 중시

민주시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있어 학생을 교육의 최우선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과 시행, 규칙 위반을 할 때 처벌 등과 같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일수록 학생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즉 학교생활교육도 별 중심의 훈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계가 처해지도록 하는 입법적, 사법적 기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가면서

87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민주라는 용어가 붙으면 왠지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느끼는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 과연 편견일까 하는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민주시민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민주시민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인정된다.

40년 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1997년 영국의 ‘크릭 보고서(영국 시민교육 지침서)’의 공통점은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프랑스는 1998년에 중학교 과정, 2002년에 고등학교 과정에 ‘시민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설치하였고, 영국은 1997년 ‘크릭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2년에 ‘시민성’ 교과목을 법정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초·중등학교에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에서 특정 가치나 정치적 주장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과 학생을 독립적,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 독일 사회가 학생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 분석,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장애요인인 보수·진보의 장벽을 뛰어 넘자는 합의로부터 탄생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민낯은 어떠하며,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을까?

우선 현행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교과와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한계와 입시 위주의 학교문화 등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개인화에 따른 범 경시 경향, 정치 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데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의 장으로서 학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이나 학교 스스로 내부역량을 키워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적 정파의 전유물로 오인되거나, 학교로부터 외면 받는 구호성 외침에 그칠 공산이 크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제각각 다르므로 국가별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상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응답 달라야 옳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은 논쟁적, 참여적 정치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육현실에서 정치참여만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래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정치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참여보다는 사회참여라는 표현이 저항감이 덜하고 확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매개체들보다도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적 이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질서를 확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여전히 정치·사회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창한 정치적 지향점을 앞세우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비판과 사회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사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논쟁을 하며,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다수결 원칙이나 합의에 앞서 갈등을 줄이는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근 정치적 상황은 일거에 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 정착시키기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주시민교육을 전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통해 우선 학교 울타리 안에서라도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현실 사회를 조망하며, 공동체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대안적인 합의 원칙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MEMO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





15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디자인 I, II(중등)

조 성 백 (오산중학교 교사)

1. 수업 목표

- 최저 임금제와 우리 삶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탐구할 수 있다.
- 논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비교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사회적 논쟁 주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2. 수업의 설계

논쟁 수업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다원화로 인해 사회의 주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론조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떤 사회에나 논쟁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양산되어 사회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가득찰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해야 하므로 논쟁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학생들은 논쟁 문제를 통해서 개념 형성과 가치 판단,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과 토론하고 협동해 가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¹⁾	
논쟁 수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현상의 올바른 이해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민주적 가치·태도의 함양 ■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논쟁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Pro-con 모형	논쟁 문제 수업을 위해 고안한 협동 학습 모형을 찬반 논쟁 협동 학습 모형, 즉 Pro-con 모형이라고 한다. Johnson & Johnson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학습 구조 하에서 사회적 쟁점을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Pro-con 모형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가 형성되고 다수의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갖게 되므로





		<p>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자아 존중감 형성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집단내에서 찬반 토론은 극단적 입장을 취해 봄으로써 관점 채택 능력을 극대화하여 다른 가치와 의견에 대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준다고 한다.²⁾</p> <p>■ 보이텔스바흐 합의 ‘강압·교화의 금지 원칙’</p> <p>학생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되면 학생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p>
논쟁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NIE (뉴스활용 교육)	<p>뉴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쟁 주제를 시민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준다. 따라서 논쟁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논조의 뉴스(사설, 칼럼 등)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논쟁 수업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사실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답이 없는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설 자체가 논쟁 문제 수업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p> <p>■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쟁성 재현의 원칙’</p> <p>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p>
	사회참여 수업	<p>민주적인 시민은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쟁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생의 신분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교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p> <p>■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해관계의 인지 원칙’</p> <p>사회적 논쟁이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입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서울형 토론모형	<p>질문이 있는 교실을 목적으로 한 서울형 토론 모형은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의 결합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비경쟁식 토론 모형으로, 교과와 비교과 등 모든 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p>
	하브루타	<p>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으로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는 학습 방법이다. 특히,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는 배울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사전에 공부해 와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이다.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p>
	공론조사	<p>논쟁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토론 없이 의견을 조사하는 여론 조사와 대비되는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을 공론 조사라고 한다. 토론 전의</p>





		여론 조사 결과와 토론 후의 공론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토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번개 질문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내용을 모든 학생들이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발표한다. 선수학습 확인이나 형성평가에 적합하다.

-
- 1) 차경수(2000), 『21세기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법』, 학문사
 2) 정문성(1996), “사회과 협동 학습에서의 논쟁 교수 모형”, 『교육논총』 13,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3) 조성백(2010), 『신문 사설을 활용한 Pro-con 논쟁 수업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수업 진행 절차

1차시(45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ackground-color: red;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5px;">NIE(뉴스 활용 수업)</div> <div style="background-color: yellow; color: bla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5px;">서울형 토론 모형</div> </div>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개 질문 • 동기 유발 • 논쟁 주제의 안내 • 학습목표 제시
전개	<div style="margin-bottom: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92d050;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NIE(뉴스활용수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E(뉴스활용수업)의 안내 • 찬성&반대 논조의 사실 분석하기 </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2d050;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서울형 토론 모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모둠 질문 선정 및 발표 • 과제 제시 </div>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정리 • 차시 예고



2차시(45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ackground-color: blue;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5px;">하브루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green;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5px;">Pro-con 모형</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background-color: cyan; color: black;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5px; display: inline-block;">사회참여 수업</div> </div>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구성 • 전시 확인 • 동기 유발 • 학습목표 제시
전개	<div style="margin-bottom: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92d050;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하브루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확인 •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92d050;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Pro-con 모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 토론과 합의안 도출, 모둠 발표 • 공론조사 </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2d050;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사회참여수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활동 계획 • 발표 </div>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정리 • 번개 질문 • 형성 평가

4. 성취기준의 분석





해당 교과 및 대상	중학교 1~3학년 사회(비상교육)	관련단원	2009개정 교육과정	사회② VIII. 일상생활과 법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① XI. 일상생활과 법 사회② I. 인권과 헌법
교육과정 (성취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	[9사(일사)05-02] 규율하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특징을 탐구한다. [9사(일사)06-03]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	(8) 일상생활과 법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 하는 공동의 약속임을 이해한다. 법의 의미와 목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법 규범의 유형과 특징을 탐구한다. 나아가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재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② 규율하는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다.			

5. 수업지도안(1차시)

수업 주제		NIE를 활용한 '최저임금 인상' 논쟁 수업		
학습 목표		1. 뉴스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이해할 수 있다. 2. 논쟁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3. 질문 만들기를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수업 모형		NIE(뉴스활용수업), 서울형 토론 모형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45분)		비고
		교사	학생	
수업 전 준비	▶ 모둠 구성 및 학습지 제작	□ 사회적 논쟁 주제를 담고 있는 뉴스(신문 사설)를 활용하여 학습지를 제작하고 배부한다.	○ 4인 1모둠을 구성하여 자리에 앉는다. ○ 학습지를 받는다.	책상 배치
도입 (10')	※수업 의도: 본시의 도입은 번개 질문으로 시작한다. 번개 질문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관심도와 선수학습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이며, 짧은 시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동기 유발 활동으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한다.			
	▶ 번개 질문	□ 번개 질문의 주제를 '아르바이트'로 제시한다.	○ '아르바이트'로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을 짧게 발표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 동기 유발	□ 동영상 ‘지식채널 e’를 상영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
	▶ 논쟁 주제 안내	□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 교사의 설명과 학습지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이해한다.	학습지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인식한다.	
전개 1 (15′) 뉴스 활용 수업	✦ 수업 의도: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쟁성 재현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쟁 주제는 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진다. 특히, 신문의 사실과 칼럼은 가장 큰 논쟁적인 주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논쟁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조의 사실을 모두 읽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해보는 과정이다.			
	▶ 뉴스활용수업 안내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조의 뉴스(사실)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논쟁 주제의 의미, 시각차, 배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상반된 논조의 사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논쟁 주제임을 확인한다. ○ 선생님의 설명과 학습지를 참고하여 논쟁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증앙일보-한겨레 공동기획 ‘사실속으로’ 활용
	▶ 찬성 논조의 사실 분석하기	□ 찬성 논조의 사실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게 한다. □ 용어 설명을 한다.	○ 찬성 논조 사실의 주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요약한다. ○ 어려운 용어를 질문한다.	학습지
	▶ 반대 논조의 사실 분석하기	□ 반대 논조의 사실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게 한다. □ 용어 설명을 한다.	○ 찬성 논조 사실의 주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요약한다. ○ 어려운 용어를 질문한다.	학습지
전개 2 (15′) 서울형 토론 모형	✦ 수업 의도: 서울형 토론 모형은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의 결합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비경쟁식 토론 모형이다. 뉴스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차시 수업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위해 질문 만들기과 개인별 조사 과제는 논쟁 주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개별 질문 만들기	□ 개인별로 궁금한 점을 찾아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	○ 신문의 사실에서 궁금한 점을 찾아 질문을 만든다.	학습지
	▶ 짝토론	□ 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다. □ 한 가지 질문을 선정하게 한다.	○ 짝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 짝과 상의하여 하나의 질문으로 합의한다.	학습지
	▶ 모둠질문 선정 및 발표	□ 모둠별 대표 질문을 선정하게 한다.	○ 모둠원 4명이 2개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발표를 지도한다. □ 학생 간 의견 교환을 촉진하며, 추가 설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의 대표 질문을 선정한다. ○ 모둠별로 대표 질문을 칠판에 판서하고, 선정 이유를 발표한다. ○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모둠별 대표 질문을 정리한다. 각 모둠 내에서 개인별로 질문을 한 개씩 배분하게 한다. □ 질문을 조사하여 차시 수업에 모둠 내에서 발표하도록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제시된 모둠별 대표 질문들을 모둠원들이 개인별로 하나씩 나누어 맡는다. ○ 차시 수업까지 조사하여 발표할 준비를 한다. 	학습지
정리 (5')	☆ 수업 의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성 재현의 원칙'을 위해 뉴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본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를 통해 사회적 논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한다. □ 질문을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업 필요성을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논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뉴스를 통해 사회적 논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한다. ○ 질문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갖는다.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과제 수행을 안내한다. □ 토론 수업을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선택한 질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운다. 	
수업 후 행동	▶ 민주시민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활용수업을 통해 사회적 논쟁 주제들을 수업에 적극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적 논쟁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다. 	

6. 수업지도안(2차시)

수업 주제		Pro-con 모형을 활용한 '최저임금 인상' 논쟁 수업		
학습 목표		1.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집단 지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논쟁 주제를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수업 모형		Pro-con논쟁 협동학습모형(이하 Pro-con 모형), 하브루타, 공론조사, 사회참여수업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45분)		비고
		교사	학생	
수업	▶ 모둠 구성	□ 학급 학생들을 4인 1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을 구성하여 자리에 앉는다.	책상 배치





전 준 비		각 모둠 내에서는 찬성 2명, 반대 2명씩 팀을 정한다. □ 학습지를 배부한다.	○ 학습지를 받는다.	
도 입 (5')	÷ 수업 의도: 전시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신문 사설을 통해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본시의 도입에서는 전시 확인을 하고, 동기 유발 차원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토론 동영상 상영하여 본격적인 논쟁 수업을 준비하게 된다.			
	▶ 전시 확인	□ 최저임금제에 대한 전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 최저임금제에 대한 전시 수업 내용을 상기한다.	
	▶ 동기 유발	□ 동영상 '100분 토론'을 상영한다.	○ 동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인식한다.	
전 개 1 (5')	÷ 수업 의도: 전시에 과제로 부여했던 '최저임금제'에 대해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 방법을 적용한다. 개인별로 수행한 과제를 모둠 친구들에게 발표하여 가르침으로써 동료학습의 긍정적 상호 작용이 가능해지며, 논쟁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기회가 제공된다.			
하 브 루 타	▶ 과제 확인	□ 전시의 과제(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인별 조사 활동)를 확인한다.	○ 개인별 과제를 확인받는다.	학습지
	▶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	□ 개인별 과제를 모둠 친구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부여한다.	○ 자신이 담당한 과제의 내용을 모둠 친구들에게 가르쳐준다.	
전 개 2 (20')	÷ 수업 의도: Pro-con 모형을 활용한 본격적인 논쟁 협동학습이 진행된다. Pro-con 모형은 토론 수업이면서 협동학습의 구조를 갖춘 비경쟁식 토론, 역지사지의 기회 제공,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소수 의견 강화, 개인별 역할 부여로 토론 수업에서의 방관자 방지, 모둠의 합의안 도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강압 또는 교화 금지의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다. 또한, 토론 전 여론조사와 토론 후 공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논쟁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변화 과정을 통해 토론의 필요성과 숙의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Pro - con 모 형	▶ 토론 안내	□ Pro-con 모형에 대해 안내한다.	○ Pro-con 모형의 절차를 이해한다.	판서
	▶ 여론조사	□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보류로 나누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여론조사 판서
	▶ 모둠확인	□ 4인 모둠을 확인하고, 모둠 내 2인씩 찬성팀, 반대팀의 역할을 부여한다.	○ 논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계없이 찬성팀 또는 반대팀의 역할에	역할 임의 배정





			맞게 토론 준비를 한다.	
	▶ 제1차토론	□ 주어진 역할에 맞춰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한다. ○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메모한다.	역할 토론
	▶ 제2차토론	□ 찬성과 반대의 역할을 바꿔 토론하도록 한다.	○ 찬성팀은 반대팀이 되고, 반대팀은 찬성팀이 되어 토론한다.	역지사지토론
	▶ 합의안 도출	□ 모둠 내에서 찬성팀과 반대팀의 주장을 모두 모아서 종합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안내한다. □ 모둠의 합의안은 찬성, 반대뿐만 아니라 제3의 대안 제시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 찬성팀과 반대팀의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의 입장에서 모둠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한다. ○ 만장일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집단지성 발휘
	▶ 모둠발표	□ 모둠의 합의안을 발표하도록 한다.	○ 모둠의 합의안 도출 과정과 결과를 간단히 발표한다.	
	▶ 공론조사	□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로 나누어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보류’는 없음) ○ 토론 전의 ‘여론조사’와 토론 후의 ‘공론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 토론을 통해 정리된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조사에 참여한다. ○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발표한다.	공론조사 판서 숙의 민주주의
전개 3 (10') 사회 참여 수업	÷ 수업 의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이해관계의 인지 원칙’에 따라 학생들은 사회적 논쟁 주제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입장을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 사회참여 활동 계획	□ ‘최저임금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계획하도록 한다.	○ ‘서명지 만들기’, ‘SNS 활용하기’, ‘youtube 영상 만들기’, ‘민원 제기하기’, ‘뉴스 댓글달기’ 등의 방법을 고민하여 사회 참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다.	창의성 발휘
	▶ 발표	□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도록 안내한다.	○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학습지





☆ 수업 의도: Pro-con 모형을 활용하여 논쟁 주제에 대한 지식 차원의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민주적인 가치·태도 등도 함양할 수 있다. 번개 질문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형성평가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정리 (5')	▶ 토론 내용 정리	□ 토론의 주제였던 '최저임금제'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	○ 토론 내용을 상기하며 논쟁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 토론 과정 정리	□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한다.	○ 민주적 토론 문화와 소통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번개 질문	□ 번개 질문의 주제를 '최저임금제'로 제시한다.	○ '최저임금제'로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을 짧게 발표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 형성 평가	□ 학습지를 수거한다.	□ 학습지를 제출한다.
수업 후 행동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학생 중심 논쟁 수업을 강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한다.	○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7. 논쟁 수업 평가표(각 차시별 10점 만점)





구분	평가 요소 (학습지 작성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		
		상 (2점)	중 (1점)	하 (0점)
제1차시	1. 찬성측 사실을 잘 요약하였는가?			
	2. 반대측 사실을 잘 요약하였는가?			
	3. 개인 질문이 논쟁 주제에 적합한가?(개인별 점수)			
	4. 짝토론 질문이 논쟁 주제에 적합한가?(짝과 동일 점수 부여)			
	5. 모둠 대표 질문이 논쟁 주제에 적합한가?(모둠별 동일 점수 부여)			
제2차시	1. 여론 조사와 공론 조사에 참여하였는가?			
	2. 제1차 토론(역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3. 제2차 토론(역지사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 모둠 합의안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 사회 참여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가?			





8. 본시의 기대 효과





적 합 성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의 적용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근본적 목표는 삶의 주체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압과 교화의 금지’, ‘논쟁성 재현’, ‘이해관계의 인지’의 3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본 수업은 학생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증시하는 Pro-con 모형을 적용하였고, 사회적 논쟁을 담은 뉴스를 활용하는 NIE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참여수업을 실천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 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최저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 많다. 따라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실 수업에서의 실천 가능성 확보	교실 수업에서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진행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가 중요하다. 교사의 부담감 감소는 수업 자료의 수월한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매주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발행하는 ‘사설속으로’ 지면을 활용할 수 있다. ‘사설속으로’는 사회적 논쟁 주제에 대한 상반된 논조의 두 신문사 사설을 비교·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논쟁 수업의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언론사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 수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연 속 성	학교교육과정 및 다른 교과수업과 지속적 연계 가능성 확보	대부분의 논쟁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영역 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논쟁 주제에 따라 다른 교과와 관련된 논쟁 주제도 NIE와 Pro-con 모형의 절차에 접목하여 교과 간 블록 수업, 또는 별도의 계기 수업,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확 산 성	다른 교과, 다른 교실, 다른 학교 일반화 가능성 추구	제1차시의 핵심 교수-학습 방법인 NIE는 논쟁 주제에 따라 다른 교과와 다른 교실, 다른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제2차시의 핵심 교수-학습 방법인 Pro-con 모형은 절차만 익힌다면 다양한 논쟁 주제를 접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말하기와 경청하기, 역사사지의 경험 해보기, 합의안 만들어 보기 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매우 유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과 상황에 따라 1차시 또는 2차시만 수업을 진행해도 논쟁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9. 학습지(1차시)

‘최저 임금 인상’ NIE 학습지

출처: 한겨레·중앙일보 2017-7-25 ()학년 ()반 ()번 이름:()

논쟁 주제의 의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의 상승 폭이다.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올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에 맞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어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보험료의 지원 규모 확대 방안,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상한선(현재 9%)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논쟁 주제에 대한 시각차(중앙일보 vs 한겨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한 중앙과 한겨레의 시각 차이는 사설의 제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가 중앙의 제목이고, ‘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가 한겨레의 제목이다. 중앙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한겨레는 적절한 후속대책이 보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중앙의 시각이다. 중앙은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는 자료를 인용하며, 가게 문을 닫는 영세 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현재 월 순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3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의 지적은 결코 귓등으로 흘려들을 말은 아니다.

과거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쪽 또는 사용자 쪽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노사가 끝까지 함께해 위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됐다는 사실, 또한 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는 사실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한겨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급 7530원은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 216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긍정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논쟁 주제에 대한 시각차의 배경(중앙일보 vs 한겨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중앙은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납품·협력 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중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중앙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한겨레의 의견은 중앙과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수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적잖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최저임금 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겨레가 덧붙이는 단서조항은 이런 것이다.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다. 이미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프랜차이즈 본부(갑)의 보복행위로부터 가맹점(을)을 지키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따라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때만이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는 것이 한겨레의 전망이다.



memo

논쟁 주제에 대한 키워드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수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낙수효과를 폐기하고 분수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부유층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수효과의 요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memo

논쟁 주제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한겨레-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달성' 공약을 지키려면 매해 15.7%씩 상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긴 했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새 평균 인상률이 7.42%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1~2%대임을 고려하면 인상률 16.4%는 파격적인 수치다. 정부가 16일 곧바로 지원대책을 내놔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쪽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책의 치밀한 시행과 시급 1만원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모로 이전과 달랐다. 거의 매해 최저임금위원회 막판에는 노동자 쪽 또는 사용자 쪽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는 중간에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끝까지 함께해 위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했다.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처음 양쪽의 간극은 컸지만 15일 밤 최종 수정안에서 노동자 쪽 7530원, 사용자 쪽 7300원으로 230원까지 간격이 좁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시기엔 차이가 있지만 '1만원'을 약속한 데 이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자 쪽 위원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영세업체 대책을 요구하는 등 최저임금이 '올과 올'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논의가 확산된 것도 성과다.

물론 시급 7530원은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 216만원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이 사용자 상황 위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68.2%가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순 없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이를 3조원으로 추산했다. 월추 200만명 이상 규모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으로 1조원 이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과 이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 산업구조를 바꾸지 여부다. 정부의 직접지원으로 이들이 급격한 비용 증가에 적응하며 체질을 바꿀 시간을 벌여줄 순 있지만 무한정 계속될 순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수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적잖다. 실제 이런 효과가 내려면 정부가 이번만큼은 상가임대차 공평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과 업종별 차등 지원 등 최저임금 산정 및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시작할 때다.

중앙일보-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올해의 최대 인상률(15.7%)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렇다. 가게 문을 닫는 영세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매출 2% 증대 전제 아래에서 이번 일로 인건비가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취약계층 근로자 입장에서라도 일자리가 줄 수 있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고졸 이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 근속기간 3년 이하 근로자나 29인 이하 사업체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시급 인상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일요일인데도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즉각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어서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재정은 연간 4조원+α에 달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도 최대 1.3%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4%로 늘어난다. 급등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추월한다. 물가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런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납품·협력 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탈원전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실험이었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





<div data-bbox="310 319 678 375" data-label="Text"> <p>사설 요약하기 한겨레</p> </div>	<div data-bbox="948 319 1317 375" data-label="Text"> <p>사설 요약하기 중앙일보</p> </div>
<div data-bbox="222 1265 365 1309" data-label="Text"> <p>개인 질문</p> </div> <div data-bbox="207 1460 380 1502" data-label="Text"> <p>짝토론 질문</p> </div> <div data-bbox="186 1653 399 1694" data-label="Text"> <p>모둠 대표 질문</p> </div> <div data-bbox="186 1846 399 1887" data-label="Text"> <p>나의 과제 질문</p> </div>	





10. 학습지(2차시)

Pro-con 논쟁 협동학습 학습지

여론 조사	<div>찬성</div> <div>반대</div> <div>보류</div> 자신의 입장에 ○표를 하세요.
제1차 토론 (역할 토론)	 memo
제2차 토론 (역지사지 토론)	 memo
모둠 합의안	 memo
공론 조사	<div>찬성</div> <div>반대</div> 자신의 입장에 ○표를 하세요.


























사회 참여 활동 계획서

활동명	예) 최저임금 홍보 노래 만들기
활동 시기	예) 일주일 동안
활동 장소	예) 인터넷에
활동 방법	예) 최저임금을 홍보하는 노래 영상을 만들어 탑재
누구와 함께	예) 모둠 친구들과 함께

11. 참고 문헌





-  강민정(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수업 토론",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광노현(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 왜? 한국교육계가 주목해야 하는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백분토론, "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 MBC, 2017년 7월 18일.
-  사설속으로(2017), "내년 최저임금 확정 사설 비교해보기", 중앙일보·한겨레신문, 2017년 7월 25일.
-  서울시교육청 블로그(2017), "서울형 토론 모형", <http://seouleducation.tistory.com/2345>
-  심성보(2018),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장은주(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성수 외 1인(2014),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라이온북스.
-  정문성(1996), "사회과 협동 학습에서의 논쟁 교수 모형", 『교육논총』 13,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조성백(2010), 『신문 사설을 활용한 Pro-con 논쟁 수업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옥(2001), "논쟁수업을 위한 찬반협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1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지식채널e(2011), "최저임금", EBS, 2011년 5월 9일.
-  차경수(2000), 『21세기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법』, 학문사.
-  최성길 외 13인(2018), 『2015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② 교사용지도서』, 비상교육.
-  최성길 외 13인(2013), 『2015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비상교육.
-  최성길 외 13인(2013),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② 교과서』, 비상교육.
-  Johnson, D.W. & Johnson, R.T.(1993),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Edina, Minnesota: Interaction Book Company.
-  Johnson, D.W. & Johnson, R.T.(1994), The pro-con cooperative group strategy: structuring academic controversy with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In Stahl, R.J. (Ed), Coopera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A handbook for teachers(pp. 306-331).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elly, T. E.(1985), Discussing controversial issues: Four perspectives on the teacher's role,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4(2), pp 113-138.





부록 1 동영상 '지식채널e' 주요 내용



📺 프로그램명: 지식채널e(729회) '최저임금'

📺 방송 일시: 2011년 5월 9일(월)

📺 제작사: EBS







부록 2 동영상 '100분토론' 주요 내용



- 프로그램명: 100분 토론(774회) '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
- 방송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 제작사: MBC







부록 3 교과서속의 논쟁 수업 관련 단위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사회② 교과서
- 단원명: VIII. 일상생활과 법 - 2. 법의 종류와 특징
- 출판사: 비상교육





사회법의 내용 사회법에는 크게 노동 관계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다. 노동 관계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경제법은 자유 시장 경제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보호하는 등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또한 사회 보장법은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사회법의 종류

- 노동 관계법: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 고용 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 경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 사회 보장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복지법 등



사리 토크!

사회법이 여러분을 도와 드려요

Q: 저와 아버가 다니시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몇 달째 월급을 안 준대요. 아버는 어떻게 해야 하죠?

A: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이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 말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진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고소할 수 있어요.

Q: 저는 장애인인데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못 찾고 싶어요.

A: 도와 드려요.

'장애인복지법'에 이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꼭! 꼭!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법을 아래 상자에서 골라 써 보자.

- (1)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생활을 규정한 법 []
- (2) 범죄의 종류와 형벌에 대하여 규정한 법 []
- (3) 행정기관의 조직, 작용, 구제를 창안한 법 []
- (4) 국가가 사적인 법 영역에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법 []

민법 형법 공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법을 찾아 연결해 보자.

(1)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이해관계 조정, 대립 완화

㉠ 사회 보장법

(2)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보장



㉡ 경제법

(3)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중소기업 보호

㉢ 노동 관계법





-  단원명: XI. 일상생활과 법 - 2. 법의 종류와 특징
-  출판사: 비상교육





학습 목표 사회법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사회법이 없던 때에는 아이들이 하루 16시간가량 일하고, 일하는 도중에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였다.

2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

사회법의 의미와 특징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독점이 나타나며,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법(社會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복지 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사회 보장법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등

사회법의 종류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경제법**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이다. **사회 보장법**은 실업, 질병, 재해, 고령,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사회법이 적용된 우리 사회의 모습



①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노동법)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법으로 보장한다.

- 한겨레 신문, 2016. 10. 5. -

공정 거래 위원회는 지난 6년간 시멘트 가격을 함께 높여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회사들에 과징금 573억 원을 부과하였다.




②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경제법) 일부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국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



③ 혼자 사는 노인 돌봄(사회 보장법)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는 「노인 복지법」, 「사회 보장 기본법」 등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를 보장한다.





-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사회② 교사용지도서
-  단원명: I. 인권과 헌법 - 3.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
-  출판사: 비상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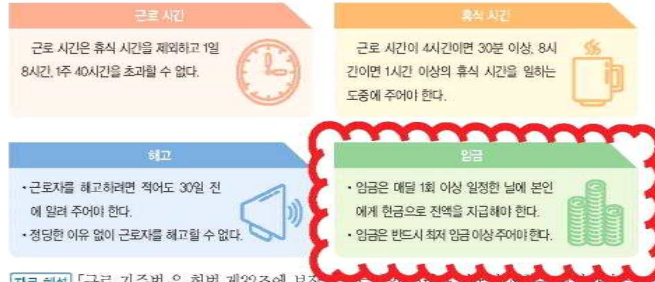


지도 Tip

한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제정되어 있음을 안내한다. 특히 근로 기준법에는 1일 및 주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및 유급 휴가, 임금 지급, 해고 방법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한다.

개념 꼭! 사례 꼭! 법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

교과서 21쪽



[자료 해설] 「근로 기준법」은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임금 지급,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여성과 소년 근로자의 보호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법」은 최저 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침해된 노동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교과서 22~23쪽

수업 전개도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 노동권의 침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함께 읽어 본다.
전개	• 신문 기사에서 침해된 노동권과 그것의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다. • 노동권 구제 방법을 설명한다. •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방향을 설명한다.
정리	• 침해당한 노동권을 구제받는 방법을 정리한다.

알아보기

부당 해고

부당 해고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이다. 사용자가 성별, 결혼, 장애, 나이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 해고가 된다.

노동권 침해

노동권 침해에는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미준수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포함된다.

내용 정리

1. 노동권 침해 사례

- (1) 임금 체불: 임금을 제때에 모두 주지 않는 것
- (2) 근로 조건 위반: 최저 임금, 근로 시간, 휴식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것
- (3) 부당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하는 것
- (4) 부당 노동 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방해, 단체 교섭 거부 등

2. 노동권 침해의 구제 방법

- (1)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 신고, 법원에 구제 요청
- (2)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경우: 노동 위원회에 구제 요청

개념 꼭! 사례 꼭!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입장을 조율해요

교과서 22쪽

- 매일 경제, 2016. 7. 22 -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 교섭의 결말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노사의 단체 협약 협력이 붕괴되었다. 이로써 ○○자동차 회사는 7년 연속으로 다름 없이 단체 교섭을 이루었다. 이번 단체 교섭은 노사 간 20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기타 근무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협의를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자료 해설] 제시된 자료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조율을 통해 노사 협상이 합의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상과 토론, 교섭을 통해 큰 갈등 없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맺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4 <사설속으로> 주요 논쟁 기사 목록



- 뉴스 섹션명: 사설속으로
- 제작 취지: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건강한 토론 문화를 뿌리내리고,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두 언론사의 사설을 비교·분석해 보여주는 지면 '사설 속으로'를 공동 제작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다룬 두 언론사의 사설에 담긴 관점과 논거를 정리하고, 관련 지식의 탐구를 돕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 발행일: 매주 화요일





발행 일시	논쟁 주제
2018-01-23	‘검·경·국정원 개혁’ 사설 비교해보기
2018-01-16	‘남북 고위급 회담’ 사설 비교해보기
2018-01-09	‘문재인 정부 특별 사면’ 사설 비교해보기
2018-01-02	‘한-미 연합훈련 연기’ 사설 비교해보기
2017-12-26	‘비트코인 광풍’ 사설 비교해보기
2017-12-19	‘금리 인상’ 사설 비교해보기
2017-12-12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설 비교해보기
2017-12-05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2017-11-28	‘공동경비구역(JSA) 북한병사 귀순 충격사건’ 사설 비교해보기
2017-11-21	‘트럼프 방한’ 사설 비교해보기
2017-11-14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설 비교해보기
2017-11-07	‘축볼 1년 평가’ 사설 비교해보기
2017-10-31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사설 비교해보기
2017-10-24	‘노동계 양대지침 공식폐기’ 사설 비교해보기
2017-10-17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2017-10-10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사설 비교해보기
2017-09-26	‘대북 인도적 지원’ 사설 비교해보기
2017-09-19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사설 비교해보기
2017-09-12	‘수능 개편 1년 유예’ 사설 비교해보기
2017-09-0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선’ 사설 비교해보기
2017-08-29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설 비교해보기
2017-08-22	‘2017년 세법개정안’ 사설 비교해보기





2018년 []월 []일	뉴스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① '최저 임금 인상' 사설 비교해보기	학년 반 번 이름:
--------------------------	---	-------------------



관심 갖기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처: EBS, 지식채널e(729회) '최저 임금'(2011-5-9)

1. 동영상을 시청하며 다음 내용을 적어보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시기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영국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부활시킨 영국 총리는?	
영국 정치연구학회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평가는?	





사설 비교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하시오.





한겨레-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출처: 한겨레, 2017.7.25.-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달성' 공약을 지키려면 매해 15.7%씩 상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긴 했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새 평균 인상률이 7.42%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1~2%대임을 고려하면 인상률 16.4%는 파격적인 수치다. 정부가 16일 곧바로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쪽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책의 치밀한 시행과 시급 1만원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모로 이전과 달랐다. 거의 매해 최저임금위원회 막판에는 노동자 쪽 또는 사용자 쪽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는 중간에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가 끝까지 함께해 위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했다.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처음 양쪽의 간극은 컸지만 15일 밤 최종수정안에서 노동자 쪽 7530원, 사용자 쪽 7300원으로 230원까지 간격이 좁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시기엔 차이가 있지만 '1만원'을 약속한 데에 이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자 쪽 위원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영세업체 대책을 요구하는 등 최저임금이 '올과 올'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논의가 확산된 것도 성과다.

물론 시급 7530원은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1인가구 표준생계비 월 216만원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이 사용자 상황 위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68.2%가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순 없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이를 3조원으로 추산했다. 월추 200만명 이상 규모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으로 1조원 이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과 이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 산업구조를 바꿀지 여부다. 정부의 직접지원으로 이들이 급격한 비용 증가에 적응하며 체질을 바꿀 시간을 벌여줄 순 있지만 무한정 계속될 순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수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적잖다. 실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이번만큼은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과 업종별 차등지원 등 최저임금 산정 및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시작할 때다.



1문단 요약



2문단 요약



3문단 요약



4문단 요약



5문단 요약





중앙일보-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

-출처: 중앙일보, 2017.7.25.-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 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올해의 최대 인상률(15.7%)까지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렇다. 가게 문을 닫는 영세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 하나금융투자 에 따르면 이번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매출 2% 증대 전제 아래에서 이번 일로 인건비가 오 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취약계층 근로자 입장에서라도 일자리가 줄 수 있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고졸 이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 근속기간 3년 이하 근로자나 29인 이하 사업체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세 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시급 인상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 리는 어제 일요일인데도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즉 각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어서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사회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재정은 연간 4조원+α에 달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도 최대 1.3%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 자의 24%로 늘어난다. 급등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추월한다. 물가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런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납품·협력 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탈원전에 이어 문 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실험이 됐다. 부작용 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관리와 기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문단 요약



2문단 요약



3문단 요약



4문단 요약



5문단 요약



6문단 요약



논쟁 주제의 의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이다.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올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에 맞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어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이라며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보험료의 지원 규모 확대 방안,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현재 9%)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출처: 중앙일보·한겨레, 2017.7.25.-

1. 위 기사의 첫 문장을 육아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보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위 기사에 등장하는 단체들의 주장을 찾아서 적어보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논쟁 주제 접근의 시각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한 중앙과 한겨레의 시각 차이는 사설의 제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가 중앙의 제목이고, '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가 한겨레의 제목이다. 중앙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한겨레는 적절한 후속대책이 보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중앙의 시각이다. 중앙은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수입이 9% 감소할 것이라는 자료를 인용하며, 가게 문을 닫는 영세 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영세업체일수록 무거워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부터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현재 월 순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3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의 지적은 결코 꺾등으로 흘러들을 말은 아니다.

과거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쪽 또는 사용자 쪽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노사가 끝까지 함께해 위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됐다는 사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는 사실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한겨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급 7530원은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월 216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긍정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출처: 중앙일보·한겨레, 2017.7.25.-

1. 위 기사에서 논쟁 주제에 대한 신문사의 시각차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중앙일보


VS

한겨레

2. 위 기사에서 논쟁 주제에 대한 신문사의 주장을 각각 적어보자.





중앙일보	한겨레
	

**시각차가 나온 배경**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중앙은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올려도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납품·협력 업체로의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중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중앙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한겨레의 의견은 중앙과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수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적잖다"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최저임금 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겨레가 덧붙이는 단서조항은 이런 것이다.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다. 이미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 행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프랜차이즈 본부(갑)의 보복행위로부터 가맹점(을)을 지키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따라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때만이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는 것이 한겨레의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한겨레, 2017.7.25.-

1. 위 기사에서 논쟁 주제에 대한 신문사의 시각차가 나온 배경을 찾아 적어보자.





중앙일보	VS	한겨레



논쟁 주제의 키워드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으시오.(초성 퀴즈)

낙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는 밑에서 위로 솟구친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낙수효과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꾸로,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낙수효과를 폐기하고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의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생각이 효과의 요체다. 문재인 정부의 ' 성장'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한겨레, 2017.7.25.-



나의 생각 정리하기

논쟁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논술하시오.





주장	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 반대)한다.
근거	그 이유는



사회 참여 하기

논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SNS에 표현해 봅시다.





참고 신문 기사





1인 생계비 안되는 최저임금...저임 노동자 비율은 최상위

OECD 회원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임금 격차 현황

저임금 노동자 비율 (단위: %)

※임금소득 불평등도 나타내는 핵심 지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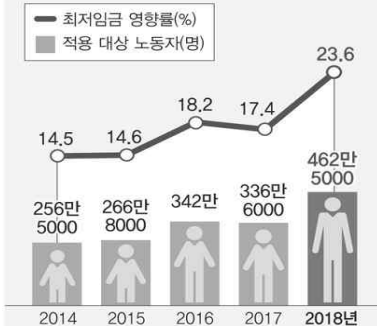
※경제수준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몇 배인지 보여줌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2016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 추이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소득격차 통계를 고려해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30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최저임금제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합의가 존재했다"며 "인상 속도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확인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오이시디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2016년 기준)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미국(5.05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23.5%·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도 미국(24.9%)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최저임금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는 175만2898원이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은 이 생계비의 89.8%에 불과하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월 125만7686원)으로는 생계비 72%만을 채웠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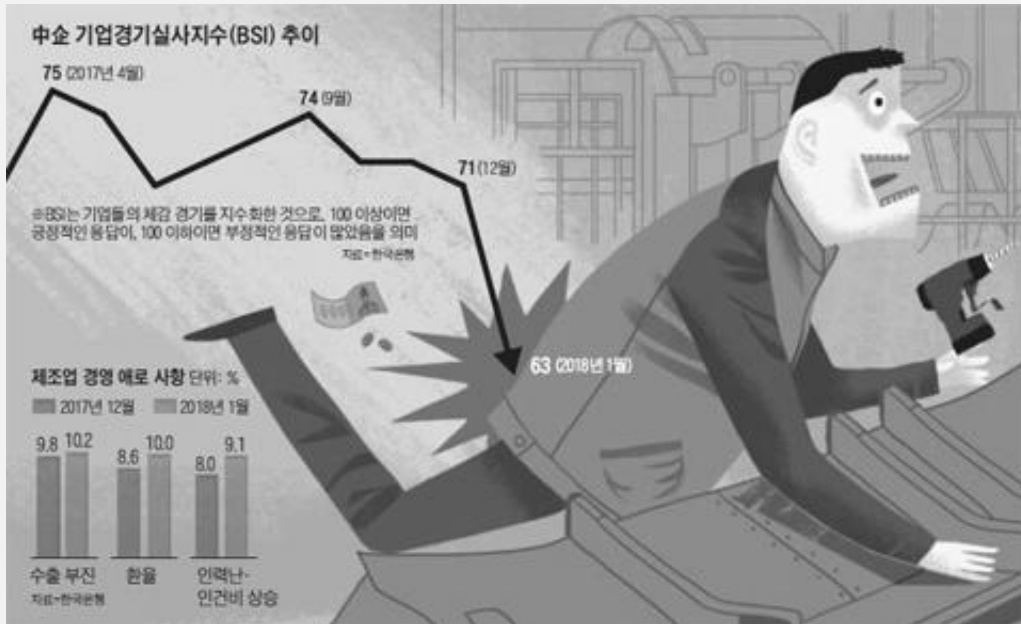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많이 제기돼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1차 분배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장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틀이 바로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18.1.31.-





공공 인 中企... 결국 최저임금 때문이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케이블 제조회사인 화일전자의 윤장혁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노동문제가 큰 걱정인데 환율도 심상치 않고, 금리도 더 인상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경영계획을 세우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성장률이 3%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선에서 뛰는 기업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5개월 만에 다시 80선 밑으로 떨어졌으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하락폭이 유독 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체감경기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와 고용 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인건비 부담스럽다"는 기업, 역대 최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랭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제조업체 중 9.1%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달 8%에서 한 달 만에 1.1%포인트 상승해 2003년 1월(9.8%)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비(非)제조업종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조사에서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제조업체는 12%로 전달보다 2.7%포인트 급등했다. 2004년 7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10.1%)을 크게 뛰어넘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조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 108개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61%가 지난 2년 전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했고, 그 주요 원인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 저하와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을 심각하게 여기는 기업은 지난번 조사 때 65.2%에서 이번에 73.1%로 증가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8.1.3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의 소모적 논쟁 끝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30% 수준인 서비스 산업 비중을 선진국처럼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새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관광과 의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과 의료산업 집중 육성으로 수도권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경제를 우선 살려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산업 진입 장벽 규제를 대폭 풀고,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파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생각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든 물류비, 구매비를 줄이든 이제는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오히려 한걸음 도약할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부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7호, 2018.1.4.,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2-3999-5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797호,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교원직무연수

지도

박 건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송 재 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기획

유 인 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홍 순 옥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이 근 행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홍 승 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검토·편집

선 보 라 장평중학교 교사

발행일 2018. 4

발행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있습니다.

